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2026. 03. 10.(화)

대한민국 농어업, 현장에서 답을 찾다!
농어업정책 대전환을 위한 지역별 타운홀 미팅 결과보고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목 차

I. 추진배경 및 목적	1
II. 추진개요	1
III. 추진경과	1
IV. 주요 현장 의견	2
V. 종합평가	13
VI. 조치계획	14
VII. 행사결과관리	15

농어업 정책 대전환을 위한 지역별 타운홀 미팅 결과 보고

농어업 정책 대전환을 위한 지역별 타운홀 미팅을 '25년 12월부터 '26년 2월까지 9개도(서면1회)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이에 대한 현장 의견과 조치 계획을 보고드립니다.

I 추진배경 및 목적

- 민주주의 본연의 가치와 정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일상화·제도화하고, 국정운영에 적극 반영(대통령말씀, '25.7.13.)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역과 대화·소통·협력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방안 도출

II 추진개요

- (기간/횟수) '25. 12. ~ '26. 2., 총 9회(서면1회 포함)
- (참석자) 농업단체장 및 농업인, 유관기관, 지자체공무원 등 1,500명
- (주요내용) 농정방향 및 도정 농정방향 설명, 현장 의견 수렴 등

III 추진경과

- 지역별 타운홀 미팅 운영 기본계획 수립('25.9.8.)
- 행사 추진을 위한 9개 광역지자체 간담회('25.9.24.)
- 지역별 타운홀 미팅 개최(8회, 경남은 서면 의견제출)

※ 충남('25.12.1.), 전북('26.1.13.), 경기('26.1.15.), 경북('26.1.20.), 강원('26.1.23.), 전남('26.1.27.), 제주('26.1.29.), 충북('26.2.3.), 경남('26.2.(서면))

IV 주요 현장 의견

지역별 타운홀 미팅 현장의견 요약

- ① **농업인 기준 재정립(3건)**: 농업인 기준 상향, 자경 기준 정립, 정책대상 확대
- ② **농지제도개선(7건)**: 임대차 제도화, 실경작자 보호, 농지현황조사, 농지매입 지원, 임대농지 정비, 친환경 임대농지 보존, 농지은행 임대차계약 수수료 폐지
- ③ **농산물유통개선(7건)**: 최저가격 보장, 조곡·정곡 정책 분리, 쌀값 조사시기 조정, 휴경용 농지 도입, 시설작목 개발, 수입 가공마늘 대책, 로컬푸드 생활권 중심 재편
- ④ **농업경영체 정책전환(7건)**: 성장단계별 연속 지원, 청년·중견농업인 매칭 지원, 상속세제 개선, 소득증빙 대책, 청년농바우처 개선, 청창농 예산배정 개선,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 ⑤ **여성농업인 정책 확충(4건)**: 교육확대, 전담조직 확충, 정책확대, 소규모 가공 지원
- ⑥ **친환경농업 2배 확대(3건)**: 소비처 확대, 인증마크 개선, 인증제도 개선
- ⑦ **축산 제도 개선 및 지원 확대(10건)**: 사료안정기금 조성 지원, 퇴비사 규제 완화, 액비 사용 행정규제 완화, 퇴·액비 사용 확대 지원, 경제동물과 반려동물 정책 분리, 대기업의 한우산업 참여 제한, 산란계 정책 결정 시 생산자 단체 협의, 염소산업 피해대책 요구, 양봉산업 지원, 사슴산업R&D 필요
- ⑧ **기후변화 대응(2건)**: 작목전환 지원, 재해보험 개편
- ⑨ **영농창업기업 지원(5건)**: 영농형 벤처 트랙 신설, 초기 창업기업 지원, 지방기업 특별보증, 무역보험 한도 상향, 스마트팜 지원
- ⑩ **농협역할강화(3건)**: 농협개혁, 원료곡 시세 공개, 품목농협 조합원자격 하향
- ⑪ **융복합산업 활성화 지원(2건)**: 판로지원, 농외소득 기준 개선
- ⑫ **태양광발전(3건)**: 발전사업 주민공유, 영농형 태양광 사업자 관리방안 마련, 태양광 설치 규제 완화
- ⑬ **농기계 정책 개선(3건)**: 공유플랫폼 구축, 부품 의무 보유기간 설정, 농기계 가격 대책 마련
- ⑭ **임업(3건)**: 수계기금 활용 확대, 위해 조수 피해 대책, 작업로 포장 지원
- ⑮ **수산(3건)**: 국가어항 지정 확대, 재해보험 개선, 김 가공공장 지원
- ⑯ **기타(10건)**: 농업예산 확대, 농어촌기본소득 시행부처 조정, 메가시티 계획 농촌 소외, 도농복합시 읍면지역 사각 해소, 직불금 분할 상환, 쌀 TRQ 재협상, 화훼산업 지원, 농촌진흥기관의 역할 정립, 용배수로 정비, 해상물류비 지원

1.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농업인 기준 재정립(8개도)

- (농업인 기준 상향) 농업인 자격기준이 낮아 취미·부업수준의 농업인이 농정의 대상이 되어 농업경쟁력 저하 요인으로 작용

※ 농업인 기준(현행): 자경면적 1,000㎡, 판매금액 120만원, 종사일수 90일

- (자경 기준 정립) 위탁영농이 일반화된 현실에서 자경과 실경작 농업인의 기준이 모호하여 실경작 농민이 정책 대상에서 소외되고 있음
- (정책대상 확대) 여성 또는 농업법인 종사 농업인 등은 실경작함에도 불구하고 농가(경영주) 중심 정책, 낮은 농외소득기준 등으로 농업 정책 수혜 대상에서 소외되고 있어 정책대상 확대 필요

2. 실경작자 중심 농지제도 개선(8개도)

- (임대차 제도화) 농지가 자경에서 임차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으나, 현행 제도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임대차가 음성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임차료 상승, 단기 계약에 따른 경영 불안정 등 문제 발생

- 임대차 양성화, 임대료 정보공개, 장기 임대차 인센티브 제공 등 현실적인 대안 마련 필요

- (실경작자 보호) 8년 자경 양도세 감면제도가 실경작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되어, 위장경작 및 불법 임대차 유발 등 구조적 문제를 야기하고 농지의 원활한 이전 및 합리적 이용을 저해

- 실경작 요건 강화,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경우 단계적 감면혜택 부여, 농업인에게 농지 이전 시 인센티브 제공 등 실경작자 보호 필요

- (농지현황조사)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농지 중에 경지정리 불량, 한계 농지 등 경작에 부적합한 농지가 다수 존재하고, 최초 지정 시 수기로 관리되어, 전산 기준 면적과 불일치 사례 다수 존재

- 지역별 농지 현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DB 등 체계적 관리 필요

- **(농지매입 지원)** 농지 가격 급등으로 귀농 및 청년농의 매입이 어려워 비축 농지 저가 공급, 농지매입자금 저리 장기대출 등 금융 지원을 포함한 대책 마련 요청
- **(농지 이용 확대)** 농지법에 의거 농지에 체험시설 설치가 불가하여 편법으로 창고나 가공공장을 체험공간으로 활용하는 사례 발생
 - 영농 생산물 활용 시 농지에서 합법적으로 체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농지법 개선 요청
- **(임대농지 정비)** 농어촌공사 임대농지 다수는 배수불량 등 조건불리 농지이나 타작물 재배 의무 부여로 임차인에게 기반정비 비용 전가
 - 타작물 재배 의무 부여 시 임대 전 배수개선 등 기반정비 필요
- **(친환경 임대농지 보존)** 유기농필지 인증까지 3년 이상 소요되어, 유기농지가 훼손되지않도록 농어촌공사 임대 시 친환경 필지 유지 여부 고려 필요
- **(농지은행 임대차계약 수수료 폐지)** 상속 등 비농업인이 농지를 소유 시 농어촌공사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 징수

3. 농업인 중심의 농산물 수급·유통 정책 개선(7개도)

- **(최저가격 보장)** 정부는 농산물 상승 시에는 수입이나 비축물을 풀어 가격 조정하나, 하락 시에는 어떠한 조치도 없어 농가 경영 악화
 - 농산물 가격 폭락 시에도 최저가격이 보장되어 농산물을 안심하고 생산할 수 있도록 정책 개선과 구조 전환이 필요
- **(조곡·정곡 정책 분리)** 농민들의 실질적인 수입은 조곡(벼)으로 결정되나, 정부에서 발표하고 정책화하는 쌀 가격은 정곡으로 정부 정책 운영 시 조곡과 정곡을 분리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쌀값 조사시기 조정)** 정부 쌀 수매가격은 수확기(10~12월) 산지 평균 쌀값을 기준으로 발표돼 공공비축미 수매비용 지급이 늦어지고, 쌀값도 하락하므로 쌀값 조사 시기를 8~12월로 조정 요청

- (휴경용 농지 도입) 벼 생산조정을 위해 콩 등 타작물 전환을 지원하고 있으나 콩도 과잉생산되고 있으므로 휴경용 농지 도입 제안
- (시설작목 개발) 청년창업농의 경우 대다수가 시설하우스에서 1년생 작물을 생산하고, 스파트팜벨리의 경우 딸기, 토마토 등 특정품목에 한정되어 특정품목의 과잉 생산 방지를 위한 시설작목 개발 필요
- (수입 가공마늘 대책) 파·마늘의 수입관세는 360%이나 양념공장에서 활용하는 가공(냉동)마늘은 27%로 낮아 관세 정책의 다각적 검토 필요
- (로컬푸드 생활권 중심 재편) 로컬푸드는 시·군 행정구역 단위로 설정되어 접경 지역 농가는 원거리 매장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행정 경계가 아닌 탄소마일리지 가치를 반영해 거리 중심(반경 20~30km)의 유연한 인정 범위 설정 요청

4. 농업경영체 성장단계별 인력육성·지원 정책으로의 전환(7개도)

- (성장단계별 연속 지원) 농업정책 사업지원비가 단발성으로 지속 성장에 한계가 있으므로 성과나 역량을 검증하여 발전가능성이 있는 농가에게 연속 지원 체계(경기도 '333프로젝트' 등) 필요
- (청년·중견농업인 매칭 지원) 청년창업농과 귀농 등 신규 유입 정책은 있으나 40대 이상 중견농업인에 대한 정책은 매우 부족
 - 유입 중심 정책을 지양하고 지역정착 선배농업인(40~50대)과 신규 창업농을 1:1로 연결하는 실무 맞춤형 멘토·멘티 매칭 시스템 의무화
- (상속세제 개선) 가업상속공제(최대 6백억까지 공제) 대상에 농·림·어업을 포함시켜 상속·증여 시 농업생산기반 상실 방지 필요
 - 작물재배업 중 종자 및 묘목생산업만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며, 전체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로 제한하는 등 타 산업과 비교해 불합리한 규정 개선

- (소득증빙 대책) 청년농업인이 아파트 입주 시 신생아 특례대출 등을 신청하려 해도 소득증빙이 어려워 거부당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특별보증대출 등의 대책방안 마련 필요
- (청년농바우처 개선) 영농정착지원금(바우처)을 경영체 등록(약 1~15년 소요)까지 발생하는 중장비 임차료, 인건비, 주거비(월세) 등 실질적 필요경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 제한 완화 필요
- (청창농 예산배정 개선)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정착지원사업은 지리적 특수성과 시기적(농번기에 자금 배정) 요인에 의해 농지 확보가 어려워 예산 집행이 저조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예산 불용으로 차년도 예산이 축소되므로 시급한 대책 마련 필요
-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은 소농가의 단기인력지원 한계, 배정인력 외 추가 인력지원 불가, 근로기간 최대 8개월 제한 등으로 농가 영농 여건의 어려움 발생
 - 계절근로자의 농가별 편차해소, 파종부터 수확까지 작업이 가능하도록 근로기간을 최대 10개월로 연장, 농업 현장 여건에 의한 관행적 위법(계약서 외 품목작업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체계 개선 요청
 - 공공형 계절근로자 지원사업의 한계가 있으므로 수확기 불법체류자 단속 유예 및 외국인 고용허가 완화 요청
 -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경우 의료보험 대상을 본인으로 한정하여 의료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5.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여성농업인 정책 확충(5개도)

- (교육확대)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와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농촌주민, 농업리더 대상 양성평등 교육 확대
- (전담조직 확충) 여성농업인 전담조직을 중앙-광역-기초 지자체까지 체계적으로 확대 설치
- (정책 확대) 여성농업인 맞춤형 복지·돌봄정책* 확대하고 특수건강검진 개시 연령을 50세에서 40세까지 하향

* 출산·육아·돌봄으로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여성농업인 생애주기별 지원체계 구축

- (소규모 가공 지원) 소규모 가공 농가는 현실적으로 HACCP 기준을 맞추기가 어려우므로 소규모 농가에 적합한 기준 마련 필요

6. 친환경농업 2배 확대를 위한 소비 확대방안 마련(7개도)

- (소비처 확대) 친환경·유기농 면적 2배 확대는 소비처 확보없이 성공이 어려우므로 학교, 군대 등 소비처 확대를 위해 정부 매칭 지원 필요
- (인증마크 개선) 친환경 포장재 표시(마크)가 GAP/지역농산물/무농약/유기농 등이 모두 비슷해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에 혼선이 유발되므로 유기농 중심의 표시체계 정비 필요
- (인증제도 개선) 결과중심에서 과정중심으로 인증제도 개선

7. 축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원 확대(6개도)

- (사료안정기금 조성 지원) 사료가격(생산비의 60%차지) 상승으로 축산농가 경영이 심각한 상태이므로 정부, 농협 등도 함께 참여하는 사료안정기금을 공동 조성하고 각 도별 조사료 생산단지 육성
- (퇴비사 규제 완화) 경축순환 농업을 위해 퇴비사가 필요하나 건폐율 제한으로 설치가 어려우므로 한시적으로라도 퇴비사를 건폐율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
- (액비 사용 행정규제 완화) 고체 퇴비는 친환경자재 등록이 되나 액비는 불가하고, 액비살포 시 복잡한 행정절차* 개선 요청

* 액비 살포 행정절차**: ①농업기술센터 시료검사·토양분석 → ②도 친환경농산업과 살포사전보고 → ③도 환경과에 살포대상 토지등록 → ④농식품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신고등록 → ⑤기후환경에너지부 가축분뇨 전자기기 시스템에 수거, 살포 등 처리공정별로 등록

** 미세먼지, 토지동결 등으로 살포 지연 시 해당 프로세스를 다시 진행해야 함

- (퇴·액비 사용 확대 지원) 경축순환 농업 확대를 위해 퇴액비 저장, 정제, 살포장비·차량 등 관련 시설·장비의 지원 및 임대사업을 확대하고 공동자원화 시설 확충 등 퇴·액비 사용 확대 지원

- (경제동물과 반려동물 정책 분리) 경제동물과 반려동물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농식품 정책의 틀 안에서 농업예산을 지출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경제동물과 반려동물 정책의 담당 부처 분리 필요
- (대기업의 한우산업 참여 제한) 한우사육특별법 시행령 제정 시 대기업의 한우산업 참여 제한 지침을 마련해 한우 농가 보호 필요
- (산란계 정책결정 시 생산자단체 협의) 정부가 동물복지 등의 이유로 산란계 사육두수를 줄이는 반면 계란을 수입하고 있는데, 수입, 방역, 동물복지, 계란가격 등 정책 결정 시 생산자 단체와의 협의 필요
- (염소산업 피해대책 요구) 수입 산양고기 등이 염소고기로 둔갑* 하여 유통됨에 따른 염소산업 피해 대책 마련 요청
 - * 흑염소 식당, 유통업체 등에서 수입산 산양고기·산양육가공품을 염소고기로 판매
 - 원산지점검 강화, 수입 산양·면양고기를 유통이력관리 대상품목으로 지정
 - 수입부터 유통, 판매, 소비단계까지 양·면양·산양·염소고기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표기 및 관리하는 방안 마련
 - FTA피해보전직불금 모니터링 대상에 염소를 포함하고 농가 생산비 보전대책 등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
- (양봉산업 지원) 양봉산업 경영위기 지원책 요청
 - 기후변화로 인한 꿀벌 집단 소실·폐사를 농업재해로 공식 인정해 복구비와 보상기준 마련을 요청
 - 산불피해지 복구나 국유림 조성 시 밀원수 식재를 확대하고 꿀벌 화분매개 활동의 가치를 인정해 직불제 도입 적극 검토 요청
 - 양봉의 월동 식량 및 영양공급용 설탕 지원 및 연구·방역체계 강화 요청
 - 시장질서 확립 및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벌꿀 등급제' 정착 지원 및 사양, 수입산 벌꿀 단속 강화 요청

- (사슴산업 R&D 필요) 사슴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산 녹용 효능 연구 필요
- 건강기능식품 시장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산녹용 비중은 감소하고 있으므로 국산 녹용의 효능을 검증 등 R&D 기반 사슴산업 활성화 필요

8.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기후변화대응(6개도)

- (작목전환 지원) 노지작물과 과수는 기후변화에 따라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나 대안으로 제시되는 스마트농업은 예산, 품목 등 현장 적용에 한계가 있으므로 기후위기 대응 실증연구를 통해 작목을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재해보험 개편) 기후변화에 따라 냉해, 폭우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나 재해보험 손해평가 사정 시 기후위기 상황이 재해로 고려되지 않아 시급한 제도 정비 필요

9. 지역발전을 위한 영농창업기업 지원 확충(3개도)

- (영농형 벤처 트랙 신설) 농식품벤처창업지원이 유통, 가공 등 위주로 선정되므로 생산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스타트업을 위한 별도의 평가기준 및 성장 지원 트랙 마련 필요
- (초기 창업기업 지원) 정부지원사업비는 자부담을 먼저 집행 이후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초기 창업기업의 경우 사업비 일부 선지급 및 창업 전용 브릿지 펀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요청
- (지방기업 특별보증) 지방에 소재한 농업회사법인은 시설 투자비용 대비 담보물 평가액이 낮게 산정돼 정책자금 및 운영자금 융자 시 불리하므로 지방 소재 법인의 경우에는 정부, 농협, 신용보증재단 등을 통해 특별보증서 발행 요청
- (무역보험 한도 상향) 국산 농산물을 원료를 사용하는 지방 수출기업의 경우 지역 농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나 수출대금 회수에 대한 불안감으로 수출 확대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무역보증 한도를 현재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 상향 요청

- (스마트팜 지원) 농가 중심의 스마트팜 지원 사업 지원대상을 농업 법인이나 기업으로 확대해 데이터 축적과 청년농 고용 확대 유인 필요

10. 조합원을 위한 농협의 역할 강화(4개소)

- (농협개혁) 농협회장 직선제, 농협 내부통제 기능 강화 등 조합원 중심의 농협개혁 반드시 필요
- (원료곡 시세 공개) 농협 RPC, DSC 중 기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원료곡 시세를 공개하지 않는 곳이 많은데 농협이 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 적정가격에 판매한 것인지 농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일정 조건을 갖춰 요구할 경우 원료곡 시세를 공개하도록 제도개선 필요
- (품목농협 조합원자격 하향) 품목농협 조합원이 되려면 일정 면적 이상의 농지를 보유해야 하지만 농지축소와 고령농·귀농인 증가 등 현실 대비 기준이 높아 조합원 자격의 사각에 있는 농업인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조합원 자격 하향 조정 필요

11.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한 융복합산업 활성화 지원(4개도)

- (판로지원) 6차산업(융복합산업)경영체의 생산품은 지역기반 농산물을 활용하고 있으나 일반기업 및 대기업과의 경쟁에 한계가 있으므로 융복합산업인증 농가가 생산하는 2, 3차 가공품의 면세 적용 및 공공기관 우선 공급 등 판로 확대 지원 요청
- (농외소득 기준 개선) 농촌융복합산업의 인증을 위해 농업인이 법인을 설립하여 소득이 발생할 경우 이를 농외소득으로 간주하여 농민수당, 직불금 등의 수령에서 배제되는 경우 발생

12. 지역주민과 농업인을 위한 태양광발전 방안(4개도)

- (발전사업 주민공유)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수상태양광^{화성,이천,용인}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주민과 관계없이 발전사업자만 소득을 가져가고 있으므로 수익 일부를 마을 주민에게 환원하는 공익형 사업으로 전환 필요

- (영농형 태양광 사업자 관리방안 마련) 영농형 태양광은 도농간 수입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업자는 반드시 실경작 농업인만 할 수 있도록 철저한 검증 및 관리방안 마련 필요
- (태양광 설치 규제 완화) 어항부지 내 주차장, 보조사업비가 투입된 시설 등은 태양광 설치가 불가하나 햇빛소득마을 등 마을공동사업 추진 시에는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요청

13. 농기계 정책 개선(2개도)

- (공유플랫폼 구축) 농가의 유희 농기계 정보를 등록하고 공유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공유플랫폼(자동차 플랫폼 '쏘카' 형태)을 개발 운영해 줄 것을 제안
- (부품 의무 보유기간 설정) 고가의 농기계를 잘 관리하여 사용연한을 높이고 싶어도 노후된 농기계의 부품을 구하지 못해 수리가 어려우므로 제조사의 농기계 부품 보유기간(10년 이상) 의무 설정 필요
- (농기계 가격 대책 마련) 개인이 농기계 구매 시 일반적으로 할인 가격으로 판매하지만 보조사업비로 구매 시에는 정가로 판매하여 보조사업이 농업인이 아닌 농기계 판매자의 이윤 확대에 더 크게 영향을 주고 있어 이에 대한 점검과 대책 마련 필요

14. 임업

- (수계기금 활용 확대) 수계기금을 산림·임업분야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
- (위해 조수 피해 대책) 산양삼 등 임업 작물이 멧돼지 등으로 피해를 많이 입었음에도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지자체 위임사무라는 답변만 하고 있어 실질적 대책 마련이 필요
- (작업로 포장 지원) 임업용 작업로 포장을 위한 지원 사업 신설 요청

15. 수산

- (국가어항 지정 확대) 경기도 안산방어진항, 충북 청풍호의 국가어항 지정 요청
- (재해보험 개선) 양식 재해 발생 시 피해신고 기한 현실화 및 보상금 확대
- (김 가공공장 지원) 경기도 생산 '김'은 마른김 가공용으로 판매하고 있으나 타지역 김 생산량이 많을 경우 불매입으로 폐기되고 있어 도내 김 가공공장 설치 요청(현재 1개소)

16. 기타

- (농업예산 확대) 정부예산 대비 농식품예산 비중 2.8%를 단계적으로 상향해 5%이상으로 확대 필요
- (농어촌기본소득 시행부처 조정) 농어촌기본소득은 농촌소멸 대응이라는 취지에 맞게 농식품 예산이 아닌 행정안전부의 지역소멸기금 등 다른 재원 활용이 바람직하므로 시행부처의 조정이 필요
- (메가시티 계획 농촌 소외) 국정과제로 국토를 '5극3특'으로 재구성하는 시도가 본격화되고 있으나 초광역권 내 농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여 권역 내 농촌의 역할 설정과 농정과 연계한 예산 배분 계획 점검 필요
- (도농복합시 읍면지역 사각 해소) 도농복합시는 행정구역상 시에 속하지만 실제 읍면지역은 소멸위기임에도 농어촌기본소득(농식품부)과 지역소멸대응기금(행정안전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인구감소지역 지정 시 전체인구가 아닌 읍면단위의 실질 인구감소율을 기준으로 법령 개정 요청
- (직불금 분할 상환) 하천부지 등 부적합 토지에 농사를 지어 수년간 직불금이 오지급된 경우, 환수 시 분할 상환이 가능하도록 조치 필요
- (쌀 TRQ 재협상) 쌀 생산과잉과 가격폭락은 40만7천톤의 TRQ(저율관세할당물량)물량에 기인한 것으로 재협상 노력 필요

- (화훼산업 지원) 화훼농가 경영난 해소를 위해 학교에서 그룹별 식물가꾸기 등 공공부문의 수요처 개발 및 절화 수입 시 외래 해충 유입에 대한 철저한 검역 요청
- (농촌진흥기관의 역할 정립) 농촌진흥기관은 농업기술 연구개발 주체로서 전문성 강화를 지원하되 행정과의 중복업무에 대한 조정 필요
- (용배수로 정비) 농어촌공사 예산이 농지 매입·임대에 치중되어,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이나 폭우 피해가 증가함에도 용배수로 및 기반시설(콘크리트화) 정비를 못하고 있어 개선 필요
- (해상물류비 지원) 제주도의 지리적 특수성을 감안해 해상물류비를 지원하고 재해보험 기초 가액 산정 시 해상물류비 반영 필요

V 종합평가

□ 현장 소통을 통해 농정 전반에 대한 문제 인식 확인

- 9개 도(서면 1회 포함)에서 개최된 지역별 타운홀 미팅을 통해, 농어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주요 어려움과 정책 개선 요구를 폭넓게 확인
- 지역과 품목은 달랐으나, 농업인 기준, 농지 이용, 수급·유통, 인력·경영체 육성, 기후변화 대응 등 농정의 구조적 영역에서 공통된 문제 인식이 반복적으로 제기됨

☞ 지역 현안 차원을 넘어, 농정 체계 전반에 대한 점진적 필요성 시사

□ 현장의견의 주요 특징

- 단기적 지원 확대나 일회성 사업 요구보다는 제도와 기준의 현실화, 정책 운영 방식 개선에 대한 요구 다수 확인
- 농업을 생업으로 유지하는 실경작자 보호 중심의 정책 전환, 농업을 지속 가능한 직업으로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대한 문제 인식이 두드러짐
- 기후위기, 농어촌 소멸, 인력 부족 등 구조적 변화에 대한 현장의 불안과 대응 요구가 명확히 드러남

□ 의의 및 한계

- 타운홀 미팅을 통해 농정 현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확인하고, 지역별·분야별 쟁점을 종합적으로 파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다만, 수렴된 의견은 현장의 목소리이며 위원회의 의사결정 이전 단계이므로, 정책 방향이나 대안으로 확정되기에는 **추가 논의와 사회적 조정**이 필요한 상황임
- 현장의 요구가 다양하고 범위가 넓어, 정책화 과정에서 **우선순위 설정과 단계적 접근**이 불가피함

□ 총평

- 타운홀 미팅 결과는 즉각적인 정책 결정을 위한 자료라기보다는, 향후 농정 논의를 설계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서의 성격이 강함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수렴된 **현장의견을 바탕으로 쟁점을 구조화**하고, 논의 과정을 거쳐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현장의 문제 인식**이 충분한 논의와 조정을 거쳐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평가됨

VI 조치 계획

□ 현장의견에 대한 역할 분담 기반 후속조치 추진

- 타운홀 미팅을 통해 수렴된 의견은 즉각적인 행정 조치가 필요한 사항과 사회적 합의와 정책 설계가 필요한 사항으로 구분하여 조치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현장의견을 단순 전달하는 역할을 넘어, 쟁점을 구조화하고 논의 과제로 정리하여 **정책 대안**을 도출

□ 관계부처에 전달·조치 요청이 필요한 사항

- 농지제도, 농산물 수급·유통, 축산·수산 제도, 재해보험, 계절근로자 등 **현행 제도 운영상 개선이 요청된 과제**를 중심으로 부처별 검토를 요청

□ 위원회 논의를 통해 정책화가 필요한 사항

- 농업인 기준 재정립, 실경작자 보호 농지 이용체계,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및 세대전환 등 농정 전반의 구조 전환이 필요한 과제를 위원회 논의 안건으로 상정

- * 논의 진행 과제 : 여성농어업인특별위원회('25.9.~), 농지제도 개선('25.11.~), 청년농업인·세대전환 과제('25.12.~)

- * 논의 준비 과제 : 농업인 기준 재정립('26.3.~), 축산업 위기 극복 과제('26.3.~), 친환경농업 확대 방안('26.3.~), 먹거리정책 제도화('26.3~)

- 기후변화 대응, 농어촌 소멸 대응, 에너지 전환(영농형 태양광 등)과 같이 중장기 국가 전략과 연계가 필요한 과제를 정책 제안 과제로 정리

- * 논의 진행 과제 :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 운영('25.10.~), 농어촌재생에너지 특별위원회 운영('25.12.~)

- * 논의 준비 과제 : 농어촌읍면자치강화와 거버넌스구축('26.3.~), 기후변화대응('26.3.~)

- 개별 지역 민원을 넘어 전국 단위 정책 개선으로 확장 가능한 쟁점을 중심으로 논의 구조화

□ 논의 결과의 정책 제안 및 환류 체계 구축

- 위원회 논의를 통해 도출된 정책 대안은 관계부처에 전달하고, 국정과제 보완 및 중장기 계획 반영 검토 요청

- 향후 타운홀 미팅, 현장 간담회 등 추가 소통 결과를 반영해 논의 과제를 지속 보완

- 현장의견 → 위원회 논의 → 정책 제안 → 정부 검토로 이어지는 정책 환류 구조 정착

VII 행사 결과 관리

- 타운홀 미팅 결과를 위원회 논의를 위한 기초 자료로 관리

- 위원회 연간 운영 일정과 연계하여 논의 가능 쟁점을 단계적으로 검토

- 향후 현장 소통 시 기존 타운홀 결과를 참고자료로 활용